

특허출원 늘어

축제나 행사에 이름을 붙일 때 주의가 요망된다. 특색 있는 행사 이름 등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허청에 고유상표로 특허 출원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 상표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 울주 문화원은 지난 여름에 개최하려다 날씨 때문에 내년으로 미룬 '반딧불이 축제' 행사와 관련, 전북 무주군으로부터 행사중지도청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공문에서 '반딧불이 축제', '반딧불이', '개똥벌레 축제' 3가지 이름은 무주군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주 문화원에서 같은 이름으로 행사를 하고 행사 홍보물을 만들면 무주군 고유의 축제행사 이미지와 독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울주문화원측은 "내년 개최예정인 반딧불이 축제 행사를 하는 수없이 다른 이름으로 바꿀 계획이지만 반딧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는 반딧불 축제행사를 알리기가 어려워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전국 9개 도에서 문화행사나, 상징물, 특산물 등의 이름을 상표로 특허출원해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은 모두 138건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풍명월', '초정, 제주도 '한라산 눈꽃 축제', '성산 일출제', 경남 '한국국제기계박람회', 전북 '호박 제비차' 등이 등록돼 있다.

출처 대전매일

특허권 교수가 가져야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발명을 자유발명으로 간주, 교수 명의로 특허를 출원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재단에 따르면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이준식 단장은 최근 열린 '대학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세미나'에서 "현행 특허법 규정상 국립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특허성 있는 기술이 사장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장은 "최근 국가가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립대교수에 대해 무상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지만 '산업발전에 특히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대부분 교수의 연구성과가 결국 사비지출을 통해 노력한 결과물인 점을 고려한다면 교수의 발명은 독일의 경우처럼 자유발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허법상 국립대 교수의 발명은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분류돼 특허권과 특허비용을 대학이 부담하고 교수에게는 보상금만이 지급된다"며 "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지적재산권의 출원과 상업화를 유도하고 특허비용도 교수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선정 교수도 "미국에서는 통상적인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특허의 권리는 발명자가 가지고 발명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계약자유문제"라고 소개한 뒤 "우리도 교수의 발명을 자유발명으로 이해하고 계약자유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테크노비즈니스 오민재 대표는 "국

내에서는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소속 학교의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거의 모든 교수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철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술이전의 확산을 위해서는 대학에 기술이전 관련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교수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특허 분쟁 해결 웹사이트 인기

남의 웹사이트 비즈니스 모델을 표절한 웹사이트를 신고하면 상금을 주는 웹사이트 바운티퀘스트(<http://www.bountyquest.com>)가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의 주요 업무는 특허권 소송을 뒤엎거나,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나 개인들에게 상금을 주는 일.

이 회사는 아마존.com(<http://www.amazon.com>), 프라이스라인.com(<http://www.priceline.com>), 이베이(<http://www.ebay.com>) 같은 온라인 소매업체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는 일명 "비즈니스 방법" 특허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반스앤노블, 아마존의 원클릭 서비스 개발 주장 뒤엎을 수 있는 정보에 상금 걸어

아마존 등의 인터넷 업체들은 특허가 있어야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좀 더 쉽게 상품을 팔고,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자체 고안한 발명품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흥미롭게도 바운티퀘스트는 최근 "원클릭" 온라인 구매 기술에 대한 아마존의 비즈니스 특허에 대해 아마존의 창립자이자 CEO인 제프 베조스와 그와 논쟁을 벌였던 컴퓨터책 출판업자인 팀 오레일리의 후원을 받고 있다.

아마존은 현재 소비자들이 매번 구매할 때마다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주문을 낼 수 있게 해 주는 "원클릭" 기술에 대한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인터넷 서점인 반스앤노블.com(<http://www.barnesandnoble.com>)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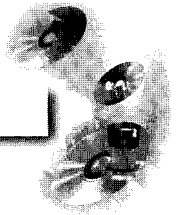
오레일리는 아마존이 원클릭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가로 누구에게라도 1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을 바운티퀘스트에 게재했다.

그는 자신과 베조스는 특허 개정이 오랫동안 지체되었다는 믿음 하에 바운티퀘스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난 제프의 특허에 하사금을 걸고 있으며, 그도 내 이런 생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마존 대변인 패티 스미스는 바운티컴이 베조스 자신의 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이는 특허를 보호받고 싶은 사람들의 이익에 상당히 부합된다고 말했다.

▶ 온라인 특허분쟁 해결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찾기

바운티퀘스트의 창업자이자 前특허변호사인 찰스



셀라는 특허를 받은 기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쓰이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 일을 가장 하고 싶었다며 “이것은 마치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 같은 것들에 대한 특허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먼저 개발됐던 것이 차후에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새로운 형태로 태어나게 됨에 따라 특허를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바운티퀘스트는 기업들이 매년 특허 출원을 위해 4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셀라 사장은 바운티퀘스트는 수백달러의 돈이 걸려 있는 특허권 분쟁에 대한 소송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에 의한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대학생과 회사원들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헤엄치다 지적재산권을 침해,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인터넷 세상에 폭 빠져 살던 부산H대학 3학년생인 이모(22)씨는 수 일전 갑자기 들이닥친 부산 영도경찰서 조사요원들에 의해 경찰에 연행됐다.

평소 행실에 특이한 문제가 없었고, 단지 컴퓨터와 인터넷을 즐기던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내용인 즉 이씨가 지난 7월 학교 PC룸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미국 하이퍼리온사의 ‘컴퓨터 자료관리프로그램’을 자신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 게재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경찰에서 ‘좋은 자료라고 생각돼 다운로드 받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지만, 이씨가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은 국내 모회사가 하이퍼리온사로 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복제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씨는 ‘주의문구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게 불찰이지만 인터넷에서 아무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라며 자신이 저작권 침해사범이 된 게 영 석연찮은 표정이었다.

이씨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회사원인 안모(30)씨도 자신의 홈페이지가 밋밋하다고 생각하던 중 인터넷에서 미 소프트웨어업체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복제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안씨도 ‘일반에 무료로 공개된 자료라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분명한 저작권 침해사범이었다.

이들외에 최근 14개 산하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된 부산지방경찰청의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일제단속에서 다수의 대학생과 회사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지방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인터넷 자료엔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지만 이용자들이 대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지나 인지도가 낮은 게 최근이며, 최근 이런 유형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늘고 있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재교육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월간 2000 12